

시론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향해(8)



박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풍파리들이 있다. 멀지 않은 1980년 불법적인 계엄선포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충격을...

다. 대개 최소한 수도(우리의 경우 서울)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 혹은 대량살상 등이 일어난 경우, 적을 진압하거나, 전시임을...

국민들이 말간 군 통수권을 본인의 악마적 살육 본능을 충족하려고 사용하는 이번 계엄은 내란반역과 아울러 집단학살을 수행했다.

이번 계엄은 국민들에 대해 총부리를 겨누고 집단적인 학살을 수행했다는 점에서(절대 마수와 계획이 아닌) 인류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족을 대상으로 상상하기 힘든,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교, 대학생 등 대다수 국민들이 질문을 던진다. 느닷없이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는 대통령이 제정신인양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평화를 향한 여정중에도 세계 무역액 순위 7위라는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광주와 전남 시민들이 민주를 넘어 세계 시민들과 연대와 평화정신을 나눌 때이다. 새로운 민족사와 세계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社說

내년 광주 세계양궁대회 조직위 붐 조성에 성패 달려

광주시 일원에서 2025년 9월 펼쳐질 세계양궁 선수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마스코트 '에코(E-Pea: Echo of Peace)'도 공개했는데, '평화의 수호자'를 상징한다고 한다. 슬로건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과 함께 지구촌에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 중심도시다. 세계양궁선수권 흥행도 이미 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하다고 하겠다. 세계양궁연맹, 대한양궁협회 등 유관 단체·기관, 지역사회 등과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최고 스포츠도시의 명성만 재고하는 게 아니다. 2024 파리올림픽 양궁 전 종목의 신화를 작성한 대한민국의 국격도 훨씬 높아지는 중대 이벤트다.

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글로벌 축제다. 세계양궁선수권(9월5-12일)은 90여개국 900여명이 참여하며, 전후로 세계양궁연맹총회(9월2-3일)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9월22-28일)도 예정돼 있다.

'전남권 의대' 정부도 후속 논의 이어가는 게 순리

전남도가 탄핵 정국 상황에서도 국립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지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신속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6학년도 국립의대 출범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도 첫 일정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무엇보

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 의공을 신속히 안정화해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피력해 일말의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이에 따른 직무 정지, 그리고 현재의 심리까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비상 시국에서 국가 운영에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남도의 경우가 그렇다. 다소 어려운 처지인 것은 맞더라도 물러날 수는 없다. 30년 숙원인 의대 신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승적 합의에 따라 급물살을 타는 다급한 현안이다.

기고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담양군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2년, 무엇이 달라졌나?

2명당 1명의 정원 규모로 도입되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며 담양군의회는 경우 지난 2022년 6월 2명의 정책지원관을 처음으로 임용, 현재는 3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양군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첫째, 의원 입법발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지난 1991년 담양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8대 의회까지 행정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가장 많았던 8대의 경우 임기 4년 동안 총 37건인 반면 정책지원관이 본격 도입된 9대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임기를 1년6개월 이상 남겨놓음에도 총 100건으로 270% 대폭 증가했다.

무엇보다 신규 조례 제정 건수가 총 40건으로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가 많아 입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다고 평가된다.

둘째,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 의원의 발언은 의정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위원의 경우 8-9명까지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별도의 보좌 인력이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의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의원

대폭 증가했다.

셋째,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가능해졌다. 매년 2차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려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의원들은 각종 자료요구 및 질의내용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책지원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탄탄한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의원의 현장 활동 및 대민 접촉이 증가했다. 별도의 지원 인력이 없던 시기에는 의정 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사무 업무의 부담으로 인해 의원의 현장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됐고 의원의 현장활동과 대민 접촉이 증가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시키고 생활 속의 다양한 민원을 군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증가했다.

이처럼 지방의회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정책지원관 제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의정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1의원 1정책지원관 등 제도의 개선과 정책지원관 담당업무 확립 및 전문성 강화 등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보좌해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담양군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

독자투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일까?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과연 얼마나 감소했을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에 관한 것이다.

통학버스 자체가 아니라, 통학버스에 탑승하거나 승·하차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제5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무심코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의 주요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인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보호 표지를 부착한 통학버스를 절대 앞지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관내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통학버스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란색 통학버스를 보면 반드시 일시정지라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도로 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김수연·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 신규 대상자 6천33명, 법인 3천633개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천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17일 오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33명, 법인 3천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천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대상자는 작년(7천966명)보다 1천700명 늘었다.

유명인으로는 개그맨 출신 이혁재 씨가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개인 명단에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2억2천300만 원을 체납해 포함됐다.



광주매일신문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Phone/Fax, and other contact info.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